‘텃밭 민심 외면’ 민주당 구태 회귀하나

기초단체장 전략공천 이어 이개호 불출마 요구 등
“대선때 낮은 자세가 어디로 갔나…1당 독주 오만”
“중앙당 개입 전략공천 ‘흑역사’ 되새겨야” 지적도

더불어민주당 심장부인 광주·전남지역 민심이 심상치 않다.

민주당이 최근 기초단체장 전략공천 방침에 이어, 전남도지사 유력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이개호 국회의원에게 불출마를 요구하는 등 지역 민심을 아랑곳하지 않는 구태가 재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5일 광주·전남지역 정가에 따르면 민주당이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호남민심을 잡기 위해 보였던 낮은 자세가 1년이 채 되기도전에 과거로 회귀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지난 총선과 대선에서 국민의당과 텃밭 쟁탈전을 벌었던 민주당이 대선 이후 지속된 높은 지지율에다, 최근 국민의당마저 쪼개져 지리멸렬해 질 가능성이 있자, 과거 ‘1당 독주 체제’의 오만이 다시 살아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구체적 징후가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지방분권,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실시되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중앙당의 과도한 개입이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중앙당이 전남지사 후보로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이개호 의원을 주저 앉히려고 한다는 움직임에다, 최근에는 광주·전남 기초단체장 4곳을 전략공천할 수 있다는 방침에 대해 입지자는 물론 지역민의 반발이 거세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 이춘석 사무총장이 전남지사 출마의사를 밝힌 이 의원에 대해 출마 자제를 요청한 것은 제1당 유지를 명분을 내세웠지만, 같은 처지에 있는 당내 5~6명의 현역의원에 대한 대응과 비교하면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그렇지않아도 광주·전남 기초단체장 선거구 4곳 규모의 전략공천 방침이 자칫 ‘특정 인사 심기’, ‘계파 나눠먹기’ 의구심이 드는 상황에서 이 의원을 경선도 전에 ‘낙마’시키려는 의도는 민심과 너무 동떨어진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이같은 중앙당 행태에 대해 과거 민심을 역행한 민주당의 ‘흑역사’가 오버랩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지난 2006년 열린우리당은 조영택 광주시장후보를 전략공천했으나 고배를 마셨다.

가깝게는 지난 2016년 총선에서 광주 동남갑에 최진, 북구갑 정준호 후보가 전략공천을 받았지만 ‘추풍낙엽’처럼 쓰러졌다.

당시 국민의당 돌풍속에 어쩔 수 없다고 항변하는 사람도 있지만, 당시 민주당 중앙당이 지역 민심을 반영하지 못한 의외의 인물들을 전략공천하면서 돌풍의 빌미가 됐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런 상황인데도 과거처럼 중앙당이 일방적으로 후보를 내리 꽂는다면 지역 민심이 다시 돌아설 가능성도 크다.

민주당 한 당원은 “6월 지방선거를 총괄할 사무총장이 현직 장관 면담은 부적절하다. 대선 이후 곧바로 1당 유지를 위해 대책을 준비했어야 했다”면서 “과거 전략공천 폐해에 볼 수 있듯이 중앙당이 개입할때마다 민심이 이반됐다”고 말했다.

광주시민 이모씨는 “국민의당이 쪼개지면서 민주당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전략공천을 이야기하는 것은 특정인사, 계파 챙기기 가능성이 다분히 있다”면서 “제발 호남민심을 그대로 받아들여라, 중앙당의 입맛에 맞게 정치공학적으로 판단을 하면 안된다. 이를 무시한다면 민주당은 지방선거에서 심판을 받을 것이다”고 말했다.

뉴시스

발언하는 윤영일 의원 5일 오전 서울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민주평화당 정강정책 설명 및 기자간담회에서 윤영일(정면 오른쪽) 의원이 발언을 하고 있다.

5일 서울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국회의장-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정세균 의장과 원내대표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정세균 의장,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여야, 내일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비례성 강화 추후 논의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국민의당이 오는 7일까지 6·13 지방선거 대비 전국 시도별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문제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국회 의장실에서 만나 이같이 결정했다. 정 의장은 이날 회동 전 모두발언에서 오는 7일까지 선거구 획정 문제를 논의해 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

우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 “7일까지 마무리하기로 했다”면서 “광역의원 선거에서 비례성을 강화하는 문제 등은 헌법 개정 및 정치 개혁 특별위원회(헌정특위)에서 더 논의하기로 했다. 이번 적용은 어렵다”고 전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방선거 준비를 위해 선거법을 조속히 처리하자는데 (여야가) 공감했다”며 “광역의원 정수 문제를 헌정특위에 조속히 합의를 요청해서 7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광역의원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시행 문제에 대해서는 헌정특위가 추후 적극 협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선거법 개정 지연으로 시·도의원 지역선거구와 시·도별 자치구·시·군의원 총정수표 확정안이 법정기한(선거일 전 6개월)인 지난해 12월13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되지 못한 상태다.

다음달 2일 지역구 시·도의원, 자치구·시의원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을 앞두고 입후보 예정자와 유권자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총정수표가 빨리 확정돼야 한다는 요구가 많았다.

여야 원내대표는 평창동계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한 국회 차원의 결의안 채택에도 합의했다.

우 원내대표는 “결의안은 한국당에서 준비한 게 있다고 한다”며 “갖고 와서 검토하자고 했다”고 말했다. 박 원내수석은 “한국당이 검토 의견을 주면 원내수석들이 빠르게 합의안을 만들어서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바른정당, ‘국민의당 합당안’ 가결… ‘미래당’ 통합 공식

유승민 “바른정당, 한국 정치와 보수 바꾼 씨앗 될 것”
국민의당 전당원투표→통합 전대 마치면 미래당 출범

바른정당은 5일 당원대표자회의를 열고 국민의당과의 합당안을 가결했다.

바른정당은 이날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당원대표자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날 회의는 당원대표자회의 소집 대상인 404명의 위원 중 303명이 참석해 성원됐다.

첫 번째 안건이었던 ‘국민의당과의 합당 결정의 건’은 303명 중 300명 찬성, 3명 반대로 최종 가결됐다.

유승민 대표는 합당안 의결 전 “오늘 합당안이 가결되면 이제 바른정당이라는 이름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지만 미래당으로 거듭나게 된다”며 “제 마음 속에는 바른정당이라는 이름을 떠나보내는 슬픔과 미래당의 성공을 반드시 이뤄내야 하는 무거운 책임감이 뒤섞여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11월13일 당대표가 됐을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제 각오는 같다. 동지 여러분과 함께 죽음의 계곡을 살아서 건널 것이고 들어갈 땐 제일 앞에 서고 나올 때는 가장 뒤에 서 있겠다”며 “오르지 바른정당의 창당 정신만을 생각하며 사즉생의 결기를 다지자”고 강조했다.

두 번째 안건인 ‘합당 수임기구 설치의 건’은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의 합당에 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하는 수임기구는 당대표, 원내대표, 선출직 최고위원, 정책위의장, 원외당원협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대표자, 사무총장 등 총 7명으로 구성된다.

바른정당이 합당 의결을 마무리함에 따라 양당 통합을 위한 절차는 국민의당 전당원투표, 오는 13일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의 수임기구 합동회의만 남았다.

합당 후 미래당의 의석수는 30여 석으로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에 이어 제3의 원내교섭단체가 될 전망이다.

뉴시스

국민의당 전남도의원 19명 집단탈당

민주평화당行

국민의당 소속 전남도의회 의원 19명은 5일 바른정당과의 통합에 반발해 집단 탈당했다.

국민의당 전남도의원 19명은 이날 오전 전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국민의당 탈당과 함께, 민주평화당 합류를 선언했다.

국민의당 소속 24명 중 19명이 참여했다. 도의원은 모두 57명이다.

이들은 “안철수 대표의 바른정당과의 통합 추진은 패권주의를 배격하고 민생을 위해 경쟁하라는 국민의 바람과 도민의 뜻을 저버리는 행위”라면서 “보수 적폐 야합으로 치닫는 국민의당을 떠나 선거구제 개편, 민생대개혁의 성공을 위해 민주평화당에 합류하겠다”고 밝혔다.

나머지 국민의당 소속 5명 의원의 추가 탈당 등 향후 거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날 국민의당 소속 목포시의회 의원 9명도 동반 탈당했다.